

한·미 자유무역시대 IT·전자산업의 새로운 도전과 비전



한·미 FTA 타결로 우리경제는 새로운 개방과 경쟁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본격적인 글로벌 스탠다드 시대에 IT·전자산업의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조명해 본다. (편집자 주)

1. 디지털TV·부품 수출증가 기대

한미 자유무역 협정(FTA)이 4월 2일 극적으로 타결돼 우리나라 IT·전자산업은 새로운 개방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한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디지털TV와 부품소재 분야에서 수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됐고 통신 분야에서는 일단 외국인들의 자본 공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방송 부문에서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의 길을 100%까지 열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관심을 모았던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과 관련, 양국이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설치해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 일정 요건 하에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협정문에 명시한 것도 수확이다.

특히 협상의 쟁점이었던 KT·SK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한도는 종전대로 49%로 묶어 외국계 자본의 공세를 막아낼 최후 방어선을 지켰다는 점에서 실리를 챙겼다. 그러나 외국계 자본이 우회해 기간통신사업자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49% 이상으로 늘린데다 이 한도내에서도 얼마든지 경영권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방송 분야에서는 보도·종합편성을 제외한 PP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49%로 제한하되 간접투자의 길은 100% 열었다. 다만 협정 발효 후 3년 동안 개방을 유예해 국내 PP들이 향후 4~5년 동안 외국계 거대 자본을 등에 업은 기업의 공세에 맞설 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조업 중 가전 분야는 미국 관세율이 낮아 수출 증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디지털TV의 경우 5%대의 관세율이 폐지돼 당장 수출증가가 기대된다. 관세철폐 시 42인치 기준으로 약 80달러의 가격인하 효과로 소

니·샤프 등 일본 경쟁사에 대한 가격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 셋톱박스도 미국방송의 디지털전환 추세에다 디지털TV 수출 확대에 따른 연관효과와 코리아 이미지 상승에 힘입어 수혜 품목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 관세철폐효과와 장기적 생산성 향상 효과

한미 FTA의 효과는 기본적으로 2가지 갈래로 진행된다.

하나는 단기적으로 관세철폐 효과로 한국제품의 미국 수입가격이 내려가대미 수출이 증가하는 것이며, 다음이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 효과로 한미FTA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고 한국과 미국간 산업기술 협력으로 우리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높아지고 새로운 성장동력과 산업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이다.

단기적 관세철폐 효과는 자동차는 물론 섬유 전기전자 기계 철강 화학 생활용품 등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제조업 분야에서 광범위하다. 수출액 기준으로 94.6%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가 3년 안에 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섬유 제품 가운데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품목 수는 1387개. 최대 30%의 관세가 사라지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스웨터 양말 화학 섬유에서부터 산업용장갑까지 중국과 대만에 빼앗겼던 미국 시장을 탈환할 기회를 맞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국시장에서 판매되는 국내 섬유업체의 130달러짜리 스웨터는 100달러 정도면 살수 있게 된다. 그만큼 가격경쟁력이 높아진다.

섬유는 대미수출이 수입을 훨씬 초과하는 품목으로 지난해 수출 20억달러에 수입 2억1900만달러로 17억7600만 달러의 흑자를 냈다. FTA 타결로 즉시 관세철폐 품목이 대거 늘어나면서 수출규모는 20%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세계 시장에서 일본제품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디지



털 가진 제품과 LCD(액정표시장치) 부분의 가격경쟁력 향상도 마찬가지다. 42인치 디지털TV의 경우 우리 제품이 일본 제품보다 80달러나 싸게 돼 미국 소비자들이 소니보다 삼성전자나 LG전자의 질 좋은 디지털 TV를 선택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거꾸로 우리가 관세를 철폐하면 미국 제품이 보다 싸게 우리 시장에 들어와 국내 수요가 증가(무역 창출)하게 되고, 그동안 일본과 유럽등으로부터 부품이나 기자재를 들여오던 기업들이 미국으로부터 보다 싸게 조달하는 등의 수입대체(무역전환)효과도 발생한다.

중소기업, 미국 정부를 고객으로 잡아라

한미FTA 타결로 통관절차도 신속 간소화돼 지금까지 5일 이상 걸리던 미국 수출화물의 미국내 통관 시간이 48시간으로 줄었다.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고, 관세가 철폐되면 동대문에서 만든 옷들이 중간 단계 없이 바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팔릴 수 있다. 2000달러 이상 대미 수출품에 대해 부과되던 물품 취급 수수료 0.21%도 사라져 연간 약 4700만 달러 정도의 물품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정부 조달시장(정부가 필요로 하는 물자를 민간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시장) 개방은 이번 FTA 협상 중 가장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미국 연방 정부에 사무용품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미국 정부가 발주한 건설 공사까지 따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자그마치 300조원대에 달하는 시장이다.

관세인하 효과보다 생산성 향상 효과가 더 커

물론 이같은 단기적 관세효과에만 의존하는 것은 금물이다. 관세철폐로 인한 수출증가와 외국인 투자증가를 생산성 증대와 경쟁력 강화로 연결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이 중요하다. 산업연구원의 분석결과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은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23.4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가운데 관세인하로 인한 효과는 10.8억달러인데 비해 생

산성 향상으로 인한 효과는 12.6억 달러로 생산성 향상 효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컸다. 개방경제에 맞게 경제구조를 업그레이드하고 법과 제도 관행 등 투자환경을 선진화해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늘리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

시장통합으로 경제 규모가 커지고, 투자자 권리보호 등 투명성이 높아지고, 대외신인도 상승에 따른 투자위험이 낮아지면 분명 외국인투자는 증가하게 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분석에 따르면 한미FTA를 통해 장기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216.3억~318.8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투자 증가는 곧바로 일자리 증가와 기술수준 향상은 물론,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로 이어진다.

FTA가 우리사회를 개방시키는 부분

항 목	제도 변화 및 요구되는 점
정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자제소권(ISD) 도입에 따른 일관성 있는 정부 정책 · 법령 제, 개정시 입법에고기간 20일에서 40일로 연장 · 피해 업종 및 근로자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 완화 정책
기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조달시장 개방에 따른 미국시장 접근 용이 ·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및 R&D 투자 확대로 제품 경쟁력 확보해야 · 투명성, 건전성 제고해 소비자 투자자에게 신뢰
개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보호정책 강화 · 글로벌 시각으로 취업 기회 넓혀야 · 피해자는 무역조정지원법, 전직, 실업 대책 적극 활용

개방경제 최대 무기는 '경쟁력'

결국 성공의 열쇠는 기업과 정부 등 경제주체의 노력에 달려 있다. 기업은 없어진 관세에 의존하지 않고 부단한 기술개발(R&D)과 생산공정 혁신, 지속적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성공적 FTA의 핵심이다.

정부는 법과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고치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투자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게 될 것이다. 개방과 경쟁의 충격으로 인해 생길지 모르는 피해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도 정부 몫이다.



정부가 취약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산업피해구제 제도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미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최고의 무기는 정부, 기업, 개인 모두의 '경쟁력'이다.

한미 FTA 대차대조표

우리가 얻은 것	분야	미국이 얻은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수출품목 85% 이상 관세즉시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용차, LCD모니터, 캠코더, TV카메라 등 대미 수출확대 - 가죽·고무·신발 등 고관세 품목 가격경쟁력 향상 · 수출물품 취급수수료 철폐 	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수출품목 80% 이상 관세 즉시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용광케이블, 항공기엔진, 전자계측기, 백미러, 프로젝션TV 등 한국수출 확대 - 오렌지 등 고관세 농수산물 한국시장 진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양허대상에서 제외 · 쇠고기 15년간 단계적 철폐+세이프가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돼지고기 최장 10년 관세할당(TRQ)적용 · 수확기 오렌지, 콩, 감자, 분유, 꿀 등 현행 관세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렌지(수확기 현행관세, 비수확기 7년) · 수산물 민감 품목 장기이행기간 및 관세 할당(TRQ)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태, 민어 등 	농수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쇠고기 단계적 관세철폐 시장접근 · 고관세 농산물 한국 수출 확대 · 명태 등 수산물 관세 완화로 수출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0cc 미만 승용차 관세(2.5%)즉시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품 즉시, 3000cc 이상 3년, 타이어 5년, 픽업트럭 10년 간 철폐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기량 기준 세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제단계 5단계→3단계 간소화 - 특소세 3년내 5% 단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품목수 기준 86.8% 관세 즉시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액 기준 61.2% · 원사기준(dis 포워드) 예외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크, 아크릴, 린넨, 라이오셀, 여성재킷, 남성셔츠 등 	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품목수 기준 97.6% 관세즉시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액 기준 72% · 자국 민감 품목 관세 유지 · 일부 품목 제외한 원사기준 적용 유지 · 우회수출 방지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성공단을 포함 남북경협지역 생산제품 한국산 인정 토대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치 -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 요건 감안해 역외 가공지역 지정 · 통관 절차간소화·신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화물 48시간, 특송화물 4시간내 통관 	원산지/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 대북관계 개선 · 남북경협 지원을 통한 한미동맹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약 최저가격 보장 불가 관철 · 약가비 적정화 방안 등 국내 건강보험 제도 틀 유지 · 지재권 관련 사항 국내 법규 수준 적용 	의약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 마련 · 복제의약품 시판 허가시 특허침해 여부 검토 제도 관철



우리가 얻은 것	분야	미국이 얻은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덤핑 조치 요건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 - 조사개시전 사전통지·협의 - 수량제한 및 가격약속 - 예비/본조사 자의적 판단 방지 · 다자 세이프가드 재량적 적용배제 	무역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덤핑 규제완화 불구 국내법 유지 - 비합산 조치 불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격한 외화유출입 통제 '일시 세이프가드' 도입 · 공적기능 수행 국책금융기관 예외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농협, 수협 등 · 우체국 보험 등 일부 공제기관 특수성 인정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보험·컨설팅 등 신 금융분야 한국 진출 확대 · 국경간 금융거래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새 기술규정 제·개정시 우리측 통보 및 의견제시권 인정 	기술장벽 (TB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 및 기술규정 개발시 비차별적 참여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적 위험평가 및 전문기관 기술협의 우선 	위생검역 (S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례협의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환경 개선에 따라 외국인 투자 증대 · 투자자-국가간 분쟁절차(ISD)간접수용 판정기준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보건, 환경, 안전, 부동산 등 정부정책 배제 - 조세정책 일반적 수용 구성하지 않음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투자 확대에 따른 자국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의료 등 공공서비스 개방 유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2개 분야유보 · 전문직 대미 진출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직자격상호인정 작업반 설치 - 건축설계사, 기술사, 수의사 자격 즉시 인정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사업서비스 분야 진출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3단계, 회계 2단계 개방 · 방송서비스 부문 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채널사업 외국인 의제 규제 철폐(발효 3년 후) - 방송쿼터 일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서비스 사업자 외국인 직접투자 지분 49% 유지 · 디지털 제품 무관세 유지 	통신·전자 상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서비스 사업 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법인 설립시 15% 간접투자제한 철폐(발효 2년 후, KT와 SKT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명령제 등 선진 기업 경쟁시스템 도입 · 공공요금 상업적 고려 배제 	경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독점·공기업 의무 규정 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 존속기간 연장기준, 심사 청구후 3년 관철 	지적재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 보호기간 50년→70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효 후 2년 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접근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양허 하한선 2억원→1억원 · 공중의견 제출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정문 이행과정에서 노동계 등 의견제시 통로 마련 	정부조달 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조달시장에서 지방정부 제외 · 노동법 수준 향상 및 집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대중 참여방안 마련 · 기존 환경 보호수준 약화 안되게 노력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법 효과적 집행 의무 준수 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재산권은 WTO 결정대까지 제소허용 유예 	분쟁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해결절차 회부 대상위반 및 비위반 조치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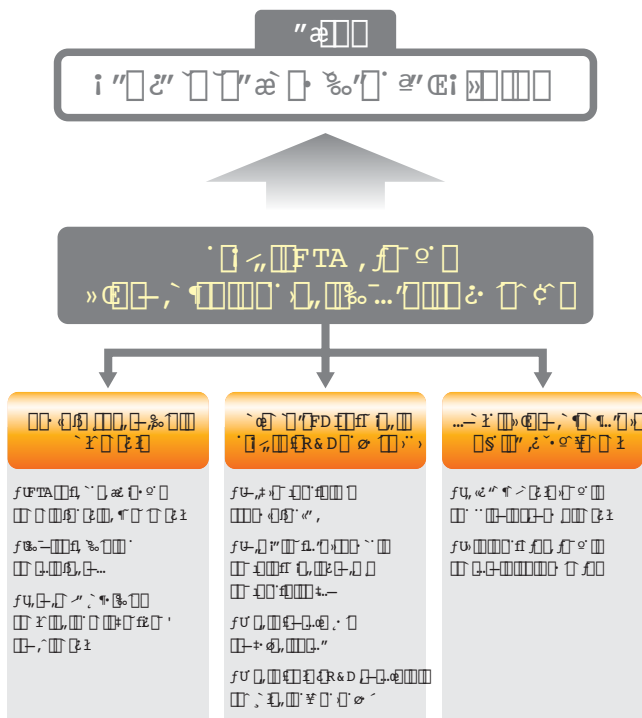


2. FTA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발전 전략

산업자원부는 4월 9일 『한미 FTA 산업전략 보고대회』를 통해 한미 FTA 타결(4월 2일)을 계기로 산업구조를 선진화하는 한편,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전략을 발표했다.

산자부는 이날 회의에서 ①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②신성장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③부품소재의 핵심기술 확보 등 우리나라가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3대 목표를 제시하고, 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한미 FTA를 통한 산업구조 선진화 달성을 설정하고 4대 부문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산자부가 발표한 4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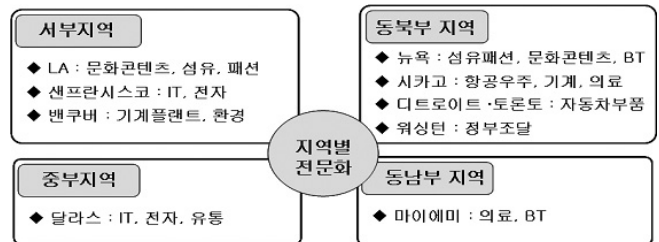
1. 전략적인 대미국시장 진출지원

FTA 유망품목에 대한 집중적 해외 마케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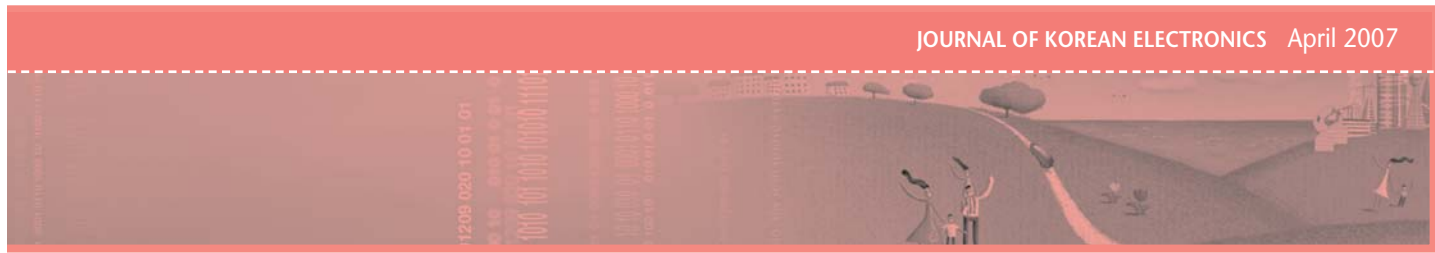
- 해외전시회, 수출 상담회 등 해외마케팅 지원 수단 총동원
 - '07.4~12월까지 총 34개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16회의 무역사절단 파견 및 '08년도 지원규모 확대 추진
 - 자동차·IT·전자부품을 중심으로 미국 글로벌 기업의 아웃소싱에 국내기업의 참여 지원
- FTA에 따라 높아진 국가 신인도를 활용, 미국내 한국상품 붐 조성
- 미국 바이어를 대상으로 국내기업 홍보활동 강화

신규 유망시장의 지속적 발굴

- 신규유망 품목 발굴 및 지역별 특성에 따른 특화 전략 추진
 - KOTRA 무역관별로 전략 품목을 선정하고 집중적 마케팅 지원



- 각 무역관별로 유망 품목 및 틈새시장 발굴, 소비자 기호도 지속 조사
- 미국시장 신규 거래패턴에 맞춘 선도적 사업 발굴 지원
 - 미국시장의 소프트화, 융합화에 맞춰, 제품을 기획·마케팅하는 미국 기업과 국내 공급업체를 연계하는 Pull형 사업지원
 - 기술협력 및 마케팅이 융합된 전문 전시회 및 시장조사 활동 지원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및 현지 네트워크 구축 지원

- 국내기업이 단독으로 시장 진출이 힘든 폐쇄적인 미국정부조달시장에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 KOTRA 현지무역관을 활용, 미국 정부조달시장 제도 분석 및 입찰정보 입수 · 제공
- 주요 전략품목(생활용품, 정보보안프로그램, 화학제품 등)에 대해 국내 및 미국 현지 조달설명회 개최 및 미국 정부조달 박람회 참가 지원
- 국내기업의 현지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강화
- KOTRA 무역관을 중소기업의 미국지사로 활용하는 중소기업 지사화 사업 강화
- 미국진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비즈니스센터(현지무역관) 설립 및 공동물류기능 활성화를 통한 현지마케팅 능력제고 지원

2. 질 좋은 FDI 유치 및 한·미간 R&D 협력 강화

국내 투자환경의 전략적 홍보

- FTA 체결 관련 홍보 및 투자환경에 대한 국제적 인식 제고
- CNN과 협의해 일주일간 한국의 정치·경제·문화 등에 관한 특집방송 실시 추진 (* '05년 중국, '06년 인도 등이 특집방송 실시)
- UNCTAD, OECD 및 EIU 등 FDI 관련 국제투자환경평가기구 방문을 통해 투자환경 및 투자유치 정책 적극 홍보
- 한-미 FTA 체결 후 변화하는 양국간 투자환경 활용 확대를 위한 포럼 개최('07.6월, Invest Korea)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유치 및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 국가별로 차별화된 투자유치활동 추진
- (미국) 대미수출 경쟁력 및 산업기반이 우수한 부문 기업 유치
- (일본 및 EU) 국내시장의 상대적 경쟁력이 약해지거나 미국시장 진출을 겨냥하는 기업 유치

- 국제수준의 외국인투자 환경 조성
- 언어장벽 완화를 통한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인프라 접근성 제고
- 교육·주거·병원 등 외국투자자들의 생활환경 개선
 - ※ 외국인학교 시설의 신·증축과 외국인학교설립운영규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강화로 외국인학교 운영 활성화
- 선진관행 정착 등을 통한 외투기업 경영환경 개선

한-미간 기술인력 교류 및 양성

- 한-미 연구자, 기업간 네트워킹 및 고급 기술인력 적극 유치
- 기술 관련 학회, 세미나, 전시회 지원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 및 대학 연구자들과在美 기업·연구자들간의 교류 기회 제공
- 골드카드(Gold Card)제도 등을 활용, 미국 기술개발인력을 적극 유치

- 미국기업 R&D센터 유치를 통한 국내 연구인력 양성

한-미간 공동 R&D, 기술이전 촉진 및 표준화 협력 강화

- 국내 기업과 미국 기업과의 공동R&D 지원 강화
- 美 상무성, NIST 등과 협의하여 과제간 매칭을 통한 공동 기술개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 추진
- 중·장기적으로 가장 강화된 R&D협력방식인 공동연구기금 조성 검토
- 미국 선진기술의 국내이전 촉진
- 우수 기술을 보유 미국 기업·연구소와 국내 기업들과의 매칭 지원
- 기업간 기술이전·판매가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기술거래시스템' 구축
- 민간 표준화 포럼 등 협력채널 구축 및 정보·인력교류 촉진
- 美단체표준 제·개정시 우리나라 전문가 의견 반영 기회 확대 및 우리에게 불리한 표준의 개정활동을 병행 추진
- 온라인 시스템 상호연계 등을 통해 표준·인증·강제기술 기준 관련 정보를 對美수출기업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



3. 선진형 산업구조 조성을 위한 보완대책 추진

- ◆ FTA 체결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로 對미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과 소속 근로자의 일시적인 구조조정 수요 발생에 대응 필요
- 이러한 무역자유화에 따른 직·간접 피해를 일정요건 하에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조정지원제도'와 '사업전환지원제도' 마련

FTA이행의 직접 피해	FTA이행의 간접 피해
무역조정지원제도	사업전환지원제도
※ 제조업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특별법
('06.4월 제정, '07.4.29 시행)	('06.2월 제정, '06.9월 시행)

무역조정지원을 통한 피해 기업·근로자 지원

- FTA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정보제공·경영개선 등 지원
- ◆ 지원대상: 제조업 및 제조관련 서비스업(51개 업종) 영위 기업
- ◆ 지원내용: 정보제공, 경쟁력 확보자금 용자,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
- ◆ 예산: '07년 210억원(필요시 증액 추진) (컨설팅 10억원, 용자 200억원)
- 무역조정기업 등의 소속 근로자가 실직하거나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에 전직 및 재취업 지원

- ◆ 지원대상: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무역조정근로자로 지정된 자
- ◆ 지원내용: 전직지원 서비스, 훈련연장급여, 단기 훈련과정 확대 등
- ◆ 예산: 고용보험기금 활용('07년 조성액 10조원, 여유자금 5.8조원)

- 무역조정지원의 효과적 추진체계 구축
- '무역조정지원위원회' 구성('07.4월), 무역피해판정을 담당할 '무역위원회' 조직 및 인력확충
- '무역조정지원센터'(중진공 내), 'FTA신속지원팀'(고용지원센터 내)설립으로 무역조정기업 및 근로자에 대해 종합서비스 제공

사업전환제도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 경쟁력이 저하된 업종·품목의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품목의 사업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지원

3. 밀려오는 FTA 급물살

한미 FTA 협상이 끝나면서 한중 FTA, 한-유럽연합(EU) FTA 등 다른 FTA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미 우리 정부는 10여개에 이르는 FTA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한-미 협상 타결로 협상력이 높아진 점을 활용해 '내친김에' 다른 FTA들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국회를 통과해 발효된 FTA가 3개, 협상타결이 1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FTA가 5개(협상 중단 포함), 협상 준비 중인 나라(내지 지역)가 4개다. 이번엔 타결된 미국을 비롯해, 중국, 유럽연합, 일본 등 세계의 주요 거대 경제권이 모두 들어있다. 유럽연합과의 본협상이 오는 5월 처음 시작되고, 중국은 산·관·학 1차 회의가 지난달에 열렸다. 중국과의 본협상도 이르면 내년께 시작될 수 있다. 일본은 협상이 중단돼 있는데, 최근 일본 쪽에서 협상재개에 더 적극적이다.

한·중 FTA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4월 5일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죄에 체결할 것을 제시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양국은 이미 2004년 11월 민간공동연구에 합의했다.

지난해 11월 통상장관 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연구 1차회의는 지난달 22~23일 열렸다. 오는 6월과 9월에도 회의가 예정돼 있다.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은 “한·EU FTA를 먼저 체결한 뒤 중국, 일본과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한·미 FTA는 우리가 FTA 허브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중국은 늦어도 2009년 상반기에 FTA를 체결하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기술경쟁력이 우위인 한국 제품의 중국 수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성장 가능성이 큰 중국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면 한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세계의 공장 중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이나 투자자 권익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국은 미국과 합의한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상대국의 정책 등으로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요구할 방침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 FTA가 체결되면 2004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17조9000억원, 수출 65억달러, 수입이 142억달러 증가한다고 예측했다.

한·일 FTA

한·일 양국 경제인들이 양국 정상에게 서한을 보내기로 하는 등 중단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과 이이지마 히데타네(飯島英胤) 일한경제협회 회장은 4월 13일 오후 서면 롯데호텔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양국 정상에게 한·일 FTA를 조기에 체결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간 민간경제협력의 장인 ‘제39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 중인 두 사람은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됐는데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한·일 FTA 협상이 중단돼 있는 상태여서 안타깝다”며 “한·일 경제인이 이번 회의에서 FTA를 조속히 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이지마 회장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리더십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계는 협상이 원활하게 재개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공산품과 관련해서는 민간차원의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농업부문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 협의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미 FTA 협상내용을 상세하게 검토하지는 못했지만 일본은 이미 많은 부분을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미 FTA가 한·일 FTA를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조석래 회장도 “한·미 FTA가 한·일 양국 재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일 FTA가 성공적으로 타결된 뒤 다른 나라에 전파돼 동아시아 경제공동체가 만들어진다면 한·일 경제인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일 무역 불균형 해소방안과 관련해 “한국이 해외수출을 위해 일본에서 원자재와 부품을 많이 수입하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며 “부품의 국산화 노력과 한·일 산업협력재단을 통한 한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